

제389회국회(임시회) 폐회중
공청회 자료집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 청 회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제2109425호 / 정부 제출)

2021. 08. 12.(목)



목 차

I. 공청회 개요

1. 안 건	3
2. 일시 및 장소	3
3. 진 술 인	3
4. 진행방법	3
※ 공청회 진술인 명단 및 주요 경력사항	4

II. 진술인별 발표내용

■ 문장렬(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11
■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소장)	17
■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38
■ 우정엽(세종연구소 연구위원)	47

III. 참고자료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제2109425호 / 정부 제출)	53
---	----



I. 공청회 개요

1 안 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의안번호 제2109425호 / 정부 제출)

2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1. 08. 12. (목) 14:00

나. 장 소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국회 본청 401호)

3 진술인

가. 인 원 : 4인

(가나다순)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문장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이성호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부대표 배석


4 진행방법

-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함.
-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1인당 10분 이내 진술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함.

공청회 진술인 명단 및 주요 경력사항

성 명	문 장 렬 (文章烈)		
생 년	1959년생		
소속 및 직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군사관학교 졸업 (1982)- 美 퍼듀(Purdue)대학교 물리학과 졸업(박사, 1991)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 ~ 현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1999 ~ 2019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2003 ~ 2004 국가안보회의사무처 전략기획실 (국방담당)- 1996 ~ 1998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비확산정책담당)- 1993 ~ 1996 육군3사관학교 물리학과 교수		

성 명	박 기 학 (朴琦鶴)		
생 년	1955년생		
소속 및 직위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학 력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주요경력	<div>- 현 평화통일연구소 소장</div> <div>- 전 한국노총 조사부차장</div> <div>- 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정책실장</div> <div>-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책실장</div>		

성 명	박 원 곤 (朴元坤)	
생 년	1968년생	
소속 및 직위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세대학교 수료 - 미국 Southwest Baptist 대학 정치학 학사 - 미국 Boston College 정치학 석사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국제정치 박사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3.~ 현재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2013 ~ 2021.2.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교수 - 1995 ~ 2013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성 명	우 정 업 (禹政燁)	
생 년	1971년생	
소속 및 직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Georgetown University 정책학 석사-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정치학 박사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8. ~ 현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2010.4. ~ 2017.3.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9.6. ~ 2010.4.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박사후 연구원	



Ⅱ. 진술인별 발표내용

제11차 SMA 협정안 비준동의 거부 제안

- 동맹의 역할과 이익의 균형 관점에서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문 장 렬

1. 거부 제안의 핵심 이유

지난 3월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의 결과 한국은 올해 13.9% 증가한 1조 1,833억원의 분담금을 미국에 지불한다. 2025년까지 우리의 국방비 인상률에 연동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하므로 국방중기계획에 의거하면 연평균 6.1%씩 증액된다. 소위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보장’이라는 전가의 보도와 같은 논리로 방위비분담 협상은 우리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 왔으나 이제 이를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 중요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맹의 역할 분담은 이미 한국군이 한국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미군에 대한 주둔비 증액은 불필요하다. 둘째, 동맹을 통해 얻는 이익은 한국이 총체적 국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대북억제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더 큰 전략적 이익을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방위비를 추가 지원할 이유가 없다. 셋째,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한미관계를 해칠 수 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6월 25일 공개한 ‘통일의식 조사 2020’에 의하면 국민 96.5%가 방위비분담금을 유지 또는 감액 해야 한다고 답했다. 넷째, 2025년까지 우리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시킨 것은 차기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 여론의 변화를 무시한

처사이다. 다섯째,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의 대폭적 확대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본 진술에서는 위에 열거한 여러 이유들 중 근본적 성격이 강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에 대하여 부연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은 오히려 감액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회가 국가의 중요한 의제를 국민의 의사를 기초로 심의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국익을 보호하는 본질적 기능에 충실할 것을 기대한다.

2. 한국방위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증대한 만큼 방위비 분담금은 감액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 문제는 안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미 의존적 인식,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 고착된 한미동맹의 구조와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풀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다시 말해, 문제의 결론은 인식, 구조, 관행 등 더 크고 근본적인 틀 내에서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리 정해지고 협상이란 그 결론을 합리화하는 과정에 불과한 면이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한다.

어떻게 고칠 것인가? 두 가지 접근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하나는 방위비 분담과 같은 개별 사안의 문제점을 세세하게 파헤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더 나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근본적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실천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상대적 약소국에게 지혜와 용기를 요하는 어려운 과업이다.

아이러니컬하게 방위비 분담은 한국이 총체적 국력으로나 군사력의 질에서나 한국방위를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 된 즈음인 1991년에 시작했다. 동맹의

역할 분담이 ‘한국주도-미국지원’이라는 틀로 형성되어 가면서 미군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때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동원된 논리는 단 하나, 한국의 경제력이 커졌다는 것뿐이다.

미군의 역할이 감소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주둔 규모의 감축이나 여타 부대 구조의 슬림화를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스스로 비용을 줄여 나가야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주한미군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공황 상태에 빠지는 한국 사회는 이 논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돈 줄 능력이 생겼으니 주면 된다’는 비논리가 횡행하게 된 이유다. 이러한 비논리는 이후 30년 동안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변함없이 적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분담금은 달러화로 지급되었던 1991년(1.5억불)부터 2004년(6.2억불)까지 14년간 4.13배로 늘었으며 이는 연평균 10.7% 인상률에 해당한다. 이후 원화로 지급되었던 2005년(6,804억원)부터 2019년(1조389억원)까지 15년간 1.53배로 늘었고 이는 연평균 증가율 2.9%에 해당한다. 원화로 환산하면 명목 금액이 지난 30년간 11배 정도로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자주국방 능력은 최소한 몇 배로 증대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방위비 분담 지급은 달러화 지불시대로 마감했어야 옳았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핵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군의 역할이 오히려 커졌고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역시 주한미군을 안정적으로 주둔시키기 위하여 늘려야 한다는 논리는 핵비확산에 대한 초보적 상식도 결한 것이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비확산체제에 협력하는 대신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전제 위에서 안 하는 것이다. 한국의 핵비무장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은 그것으로 주고받기식 계산이 끝난 사안이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에서 북한핵을 운위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3.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므로 방위비 분담금은 감액해야 한다.

동맹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분담금이 정해져야 하는 것 못지않게 수혜의 크기에 따라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대략 1980년대까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얻은 안보 이익이 매우 컸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 1991년부터 14년간 달러화로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 약 50억불은 사후 보은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탈냉전기에 들어 남북한 국력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북 군사대비에서 주한미군으로부터 얻는 이익의 크기는 줄어들었다. 특히 2000년대에 와서는 사실상 자주국방을 완성하여 동맹의 군사적 수혜보다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의미에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한국은 동맹으로부터 이익뿐만 아니라 위험부담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원래 동맹이라는 것이 양자 모두 일정한 비용을 투입하고 연루와 같은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부담한 위험은 2017년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제재와 같이 실질적인 것이다. 다 알다시피 미국은 이 사태에서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운용,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 유엔사 재활성화 등은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위험 요소인 것도 사실이다.

한편, 미국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는 유무형의 이익은 훨씬 더 크고 다양할 뿐 아니라 사실상 위험부담 없는 순이익이다. 미군의 한국 주둔 비용은 본토를 포함하여 어딘가 주둔해야 할 군대를 위한 비용이며 상호방위조약(MDT)과 주

둔군지위협정(SOFA)에 의거하여 다른 곳보다 더 저렴하게 지출되고 있다. 적어도 과도히 비싼 것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다.

미국이 얻는 한미동맹의 이익은 첫째, 동북아와 세계 차원의 전략에 주한미군을 활용하며, 둘째, 한국군을 작전통제하면서 한반도의 군사 및 평화와 관련된 문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셋째, 무기 판매로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며, 넷째, 안보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 부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반을 확보하는 등 실로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이 모든 것 위에 보너스로 더 얹어주는 현금인 셈이다.

다시,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는 방위비 분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미국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제국은 원래 그런 것이다. 제국이 아니더라도 모든 국가는 본성상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극대화하려 한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첫째, 이제 우리의 능력에 대한 자심감을 가지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은 세계가 공인하고 있다. 하드파워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외교력, 문화적 잠재력 등 소프트파워도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자신감은 국민 일반과 정부 그리고 군대가 모두 함께 회복하고 강화해 나갈 가장 근본적인 과제다. 국민의 인식이야 어떻게 하기 어렵겠지만 최소한 행정부, 국회, 군대 등 공직사회는 시대적 책무로 받아들이고 조속히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둘째, 자신감에 기초하여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주한미군 변화 얘기를 듣는 순간 공황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 계산에 따라 주한미군을 거의 항상 일방적으로 감축하거나 철수해

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한미동맹이나 미군의 주둔은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지 않는가. 동맹관계는 유지하더라도 주한미군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쿨하고 좋게(in a cool and good manner) 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향후 주한미군을 주권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작통권 환수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전력증강이나 무기의 운용과 훈련 등 주한미군의 군사활동이 과도하여 오히려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한하고, 사실상 또 하나의 주한미군인 유엔사에 대한 주권적 통제도 실행해야 한다. 이는 역할 관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소요를 제거하는 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미동맹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결국 한미동맹은 1차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충실히 복무해야 하고 그 이상의 전략적 역할 역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역할과 수혜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국회는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박 기 학

< 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할 근거 >

1.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 원에서 동결됐다는 발표는 거짓. 실제로는 4,307억 원을 더 주게 되어 있어. 이를 막으려면 11차 협정 부결시켜야.
2.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13.9% 중 인건비 인상률 6.5%는 거짓!
3. “인건비 최저지급비율의 75%에서 85%로의 확대, 인건비 선지급 명문화”는 미국 부담만 줄여주고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장치는 안 돼, 제도개악일 뿐.
4. 연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의 국방비 증가율 연동은 미국 퍼주기
5. 한국이 직접 방위비분담금의 소요를 심사하고 결정, 집행하자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제도개선 요구가 철저히 무시되었다.
6.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수행에 쓰는 것은 불법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 ①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2019년 수준인 1조389억 원에서 동결했다.
- ② 2021년 방위비분담금은 13.9% 인상한 1조1,833억 원이다. 13.9%는 ▲2020년도 국방비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다.
- ③ 2022~2025년까지의 연도별 방위비분담금액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다
- ④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최저배정비율을 75%에서 87%로 확대하고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을 명문화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다(외교부 보도자료, 2021.3.9.)

그러나 위 정부 발표에는 11차 협정을 부결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거짓과 기만이 숨겨져 있다.

1.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 원에서 동결되었다는 정부 발표는 거짓이며 실제는 41.5% 인상!

정부는 선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누락시키고 있다.

제11차 특별협정 제2조는 “2020년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1조 389억 원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2019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결되었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이다.

11차 특별협정 제2조는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시 2020년 인건비 분담 지원분 3,144억 원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것과 나머지 비용분담 항목

(categories)에 해당하는 2020년 지원분이 이월된다(roll over)는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 이 규정은 11차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 전에 선지급된 인건비 3,14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의 방위비분담금 7,245억 원(1조389억 원-3,144억 원)을 추후에 미국에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3월 9일 보도자료에서도 2020년에 선지급된 인건비 3,144억 원을 제외하고 7,245억 원을 미국에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20년에 선지급된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3,144억 원만이 아니다. 다른 나머지 항목 즉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도 선지급되었다. 국방부는 홈페이지(재정정보공개/월별세입세출예산 현황)에 매월 예산 지출현황(표2)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2020년 1~12월 누적 방위비분담금 예산지출은 인건비 3,144억 원, 군사건설비 3,306억 원, 군수지원비 1,001억 원으로 나와 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결산보고서에도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7,264억 원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다.

<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1~12월 누적 세출예산현황

(단위: 억 원)

2020년 선지급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계
3,144	3,306	1,001	7,451

출처 : 국방부 홈페이지 월별 세입세출예산 현황

군사건설비 3,306억 원과 군수지원비 1,001억 원도 선지급 되었음으로 인건비 3,144억 원이 아닌 7,451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938억 원을 미국에 추후 지급해야 할 돈으로 계산해야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 원에서 동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선지급한 방위비분담금에 인건비 3,144억 원만 포함시키고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은 누락시키고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추후 지급될 7,245억 원에 선지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이 포함되는가”를 정보공개청구하자 외교부는 “국방부가 기집행한 4,307억 원은 7,245억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21.4.7.)라고 답변하였다.

이렇게 되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3,144억 원과 2020년에 선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 여기에 추후 미국에 지급하게 될 7,245억 원을 합쳐 1조4,696억 원이 된다.

따라서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 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1조4,696억 원이며 동결된 것이 아니라 41.5%가 인상된 것이다. 11차 특별협정이 통과 되면 한국은 특별협정 제2조에서 규정한 1조389억원보다 4,307억 원을 더 주어야 한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11차 협정을 부결시켜야 한다.

과거 미지급금을 줬다고 해도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41.5% 인상된 것은 변함없는 사실

국방부는 2020년에 선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는 과거 8차/9차/10차 특별협정 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을 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방부의 해명은 뒤에서 살펴보지만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거짓이긴 하지만 국방부의 해명은 2020년에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이 선집행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의미가 있다.

과거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2020년도에 집행된 이상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액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2020년도에 지출해놓고서도 그것이 과거 미지급금 지급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를 제외하고 국민에게 발표한다면 이는 분명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을 고의로 축소하려는 의도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과거 미지급금을 지급했다는 국방부 해명은 거짓

국방부는 4,307억 원이 과거 8차/9차/10차 특별협정 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을 2020년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이다.

첫째 8차/9차/10차 어느 협정이든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다.

유효기간은 8차 특별협정이 2009~2013년이고 9차 협정은 2014~2018년이며 10차 협정은 2019.1.1.~12.31까지이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협정을 지켜야 할 의무도 소멸된다. 유효기간이 지나서까지 협정의 구속을 받는다면 한국은 8차, 9차, 10차, 11차 협정에 의해 삼중, 사중으로 구속되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둘째 과거 미지급금에 대해서 미국이 지불을 요구한 적도 없고 한국이 지불한 적도 없다.

셋째 과거 미지급금이라 하더라도 지급하려면 반드시 국방예산에 편성해야 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어디를 봐도 과거 미지급금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없다. 이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 편성이 11차 특별협정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국방부도 4,307억 원이 선지급된 것에 대해서 취재하는 언론에 사실은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2020년 본예산 1조389억 원 중에서 지출한 것임을 시인하였다고 한다.

넷째 2020년은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에 속한다. 그런데 11차 특별협정 어디를 봐도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의 선지급이 과거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규정한 조항이 없다.

어느 면으로 보나 2020년에 미지급금을 지급했다는 국방부의 말은 1%도 신빙성이 없다.

10차 협정 제7조에 의거해 2020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집행했다는 국방부 주장은 거짓이다.

정부는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의 집행이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 또는 제8차 및 제9차 특별협정 5조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제10차 협정 제7조는 과거 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국방부의 해명은 거짓이다.

10차 특별협정 제7조는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년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비용 분담 지원분 또는 군사건설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제8차 및 제9차 협정 5조 내용도 제10차 협정 제7조와 동일하다.

제10차 협정 7조는 제10차 특별협정 기간(2019.1.1.~12.31)에 예산에 편성된 군사건설 또는 군수지원 사업이 협정 유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경우 협정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폐기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는 일반적 조항일 뿐이다. 이 제7조가 제10차 특별협정에서 정한 1조 389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의 한도를 넘겨서까지 2019년에 편성된 군사건설 사업 및 군수지원 사업을 완결 짓는데 필요한 수년간의 모든 비용을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이 아님은 당연하다.

제10차 특별협정의 협정금액은 1조 389억 원이며 이 돈은 2019년에 이월액 184억 원과 불용액 78억 원을 제외하고 다 집행되었다.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에 따른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의 2020년도 계속 집행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이월된 184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처럼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는 10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내(2019년 1년간) 편성된 예산이 다 지출되지 않고 이월되는 경우 그에 한해서 다음연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2020년도 4,307억 원의 집행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이 조항을 근거로 4307억 원을 집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관련자들은 처벌되어야 한다.

11차 특별협정이 미체결인 상태에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집행은 불법

국방부는 11차 특별협정이 미체결인 상태에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 7,451억 원(인건비 3,144억 원과 군사건설비 3,306억 원, 군수지원비 1,001억 원)을 집행했다. 이처럼 특별협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까지 마친 경우는 초유의 일이다. 11차 특별협정이 미체결인 상태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행위는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세부지침』 및 국가재정법 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를 어긴 것이고, 나아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과 조약비준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평통사는 방위비분담금 예산 7,451억 원을 불법적으로 배정 또는 집행한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5억 원 이상 국고손실 등) 위반으로 올해 1월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 중이다.

정부의 거짓 발표로 우리 국민은 4307억 원을 더 지급하게 돼 국고손실 발생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 원으로 동결되었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 원보다 4,307억 원이 더 지출되는 것이므로 4,307억 원의 국고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평통사는 올 6월에 11차 특별협정 협상 책임부처의 장인 정의용 외교부장관, 방위비분담 집행 책임부처의 장인 서욱 국방부장관, 협정 정식 서명자인 최종건 외교부 차관 등을 형법 355조 배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수사 중이다.

2.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중 인건비 증액 요인 6.5%는 거짓!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최저배정(지급)비율을 75%에서 85%로 확대하기 위해서 2021년 방위비분담금 6.5%인상(675억 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이다. 진실은 인상요인이 없고 오히려 감액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 위해 방위비분담금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의 허구성

10차 특별협정 기간(2019년) 한국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89%를 지급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11차 특별협정 기간의 인건비지급률의 최저선을 10차 협정 기간 인건비지급률 89%보다 낮은 85%로 제시하면서 6.5%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 이를 누가 납득하겠는가! 이번 11차 협정에서는 10차 협정 때 89%보다 4% 낮은 85%만 지급해도 되므로 감액요인이 발생한다.

설사 인건비 최저 지급비율을 늘리고 그에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인건비 액수와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 배정 비중과 액수를 늘리고 대신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 배정 비중과 액수를 낮추면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미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소요에 기반해 산정하지 않는다. 한미 간 협상을 통해 총액에 먼저 합의한 후 그 총액을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배정한다. 따라서 인건비 인상률을 별도로 계산해 이를 전체 인상률에 덧붙이지 않는다. 이러한 인상률 산정 방식은 방위비분담금 역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어디까지 방위비분담금을 최대로 올려주기 위해 한국 정부가 잔 톱수를 부린 것이다.

6.5% 인상요인이 있다는 외교부의 계산식은 조작된 것이다.

외교부는 방위비분담금 6.5%의 인상률을 산출한 근거(계산식)를 묻는 평화통일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2021.4.13.)에 대해서 <2019년 한국인 근로자 총 인건비(5,641억 원)의 12%(87%-75%, 677억)÷2019년 방위비분담 협정 총액 1조389억 원 ×100=6.5%>의 식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한국인 근로자 총 인건비(5,641억 원)의 12%(87%-75%, 677억)

$$\frac{\quad}{\quad} \times 100 = 6.5\%$$

2019년 방위비분담 협정 총액 1조389억 원

이를 풀이하면 2019년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총액을 기준으로 한국이 인건비의 지급비율을 75%에서 87%로 올리는데 필요한 돈은 677억 원이고 그것은

방위비분담 총액의 6.5%에 해당한다는 계산식이다. 그러나 이 계산식은 외교부가 6.5%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억지로 꿰맞추기 위해 계산식을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보여준다.

첫째 외교부가 밝힌 계산식에 따르면 한국이 2019년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총액 5,641억 원)의 75%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19년에 실제 인건비의 89%(5,005억 원)를 지급했다. 외교부가 한국이 마치 2019년에 인건비의 75%를 지급한 것처럼 보면서 87%로 인건비지급비율을 12% 올리는데 필요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요인을 계산한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

둘째 위 외교부 계산식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도에 한국이 지급해야 할 인건비 최저지급비율을 87%로 잡고 그에 필요한 방위비분담 인상률을 6.5%로 계산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한국이 실제 지급한 인건비 지급비율은 89%(5,005억 원)이었으므로 2%의 감액 요인이 생기는 것이다. 2021년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배정비율을 87%(4,907억 원)로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증감률을 2019년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총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2%(98억 원=5,005억 원-4,907억 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한다. 이는 방위비분담금 총액(1조389억 원)으로 환산하면 0.9% 감액요인이다. 6.5%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한다는 정부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다.

셋째, 2021년도 인건비 상승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바로 그 전년도인 2020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도 인건비가 아니라 2019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인상률을 계산하는 기본 상식조차 지키기 않은 것이다. 2020년도 인건비가 2019년도 인건비보다 크게 작아 이를 기준으로 하면 6.5%(675억 원)라는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인건비 총액은 5,407억 원(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 2021.4.26.)으로 2019년도 인건비에 비해 234억 원이나 줄었다. 2020년 인건비 총액 5,407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2021년에 한국이 인건비 총액의 87%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돈은 4,704억 원이다. 이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인건비 총액의 87%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돈은 4,704억 원으로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는 2019년도 인건비 배정액 5,005억 원보다 301억 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한다. 이를 방위비분담금총액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2.9% 감액요인이 된다.

넷째 11차 특별협정 이행약정(제3절 인건비분담 5항)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는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전체의 최소 85%를 한국의 특별조치협정 지원분을 사용해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11차 특별협정에 의하면 한국이 인건비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인건비 총액의 87%가 아니라 85%다. 그러나 위 외교부의 계산식은 한국이 87%까지 인건비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2% 포인트만큼 인건비 증액요인을 더 부풀리고 있다. 한국이 85%까지만 지급하면 되므로 89%를 한국이 지급하던 때와 비교하면 4%의 감액요인이 생긴다.

외교부 계산식은 기준연도나 한국의 최저지급비율 등을 임의로 적용하는 등으로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산식에 따르더라도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인상 요인은 없다. 외교부가 사실에 따른 객관수치에 근거해 인건비 상승 요인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올려주어야 할 액수와 비율을 미리 정해 놓고 역으로 껴맞췄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의 실무관료들이 국회 의원실(보좌관)을 상대로 11차 특별협정을 설명하면서 6.5%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

다고 한다. 이것도 2021년에 올려주어야 할 방위비분담금 인상액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꿰맞추다보니까 빚어진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

3.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가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정부 주장도 거짓이다!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급 비율의 최저선을 75%에서 85%로 늘리고 85%를 종전의 노력(end endeavor) 규정에서 의무(shall) 규정으로 바꾸며,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선지급을 명문화함으로써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인건비의 최저지급비율을 8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 장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6차(2005) 및 8차(2009) 특별협정에서 71%까지 배정가능하게 되었고, 9차 특별협정(2014)에서는 75%까지 배정가능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인건비 배정비율의 상향조정이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도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 감원이나 무급휴직 위협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건비배정비율 인상은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 장치가 안 됨을 확인해주었다.

제10차 특별협정에서는 인건비 지급 최저선이 75% 이상으로 정해져 100%까지 지급할 수 있게 협정(이행약정)이 개정되었다. 이 바뀐 이행약정에 따라 한국은 2019년에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89%(5,005억 원)를 지급했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인 2020년에 미국은 한국인 노동자 4,000여 명을 강제 무급휴직시켰다. 또 제10차 특별협정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전 특별협정에서는 이행약정에 있던 “당사자의 관계 당국은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규정을 본 조약(제5조)에 격상해 규정하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를 지키지 않고 한국인 노동자들을 강제로 무급 휴직시켰다.

그간 주한미군의 행태를 보면 인건비 지급비율이 85% 이상으로 의무화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나머지 15%의 인건비를 댈 돈이 없다고 하면서 한국인 노동자 감원이나 무급휴직 위협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별협정 공백 시 인건비를 선지급하기로 명문화한 것 역시 한국인 노동자의 감원이나 무급휴직 방지 장치가 될 수 없다. 만약 미국이 원하는 방위비분담 인상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아 차기(제12차) 특별협정 체결이 지연되거나 체결이 안 될 경우 미국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부족하다며 얼마든지 한국인 근로자의 감원을 위협할 수 있다.

노동자 인건비 지급비율 확대나 협정 공백시 인건비 선지급 명문화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가져오지 못하며, 미국에게는 인건비부담 축소와 그에 따른 예산절약이라는 이중 효과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점에서 이는 제도개선이 아니라 제도개악이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라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횡포에 한국정부가 굴종한 결과다.

주한미군 무급휴직과 감원 위협으로부터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미소파의 독소조항인 노무조항을 고쳐야 하고 주한미군에게 인건비를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그 돈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야 한다.

4.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의 국방비 증가율 연동은 전형적인 미국 퍼주기다!

역대 어느 정부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증가율에 연동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2022~2025년 사이 연간 방위비분담금총액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역대 한국 정부는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킨 적은 있지만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킨 전례가 없다. 일본도 5년 유효기간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물론이고 물가상승률과도 연동시키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것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미국 퍼주기를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물가상승률(2018~2020)은 0.8%에 머물고 있다. 반면 국방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2018~2021)에서 평균 7.0%로 이명박 정부의 5.2%, 박근혜 정부의 4.1%보다 훨씬 높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연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면서도 상한선(4%)을 두어 지나친 인상이 안 되도록 하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국방비 상승률에 연동하면서도 상한선을 두지 않음으로써 국방비 상승률의 100%가 방위비분담금 상승률에 반영될 수 있게 해주었다. 안규백 의원은 2021년 3월 16일, 국방위에서 “이전 협정에서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면서 상한선을 두었는데 이것을 걷어차 버렸다”면서 “국방비 증가에 연동된다면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해 국방비 증가율 연동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방비증가율이 국력의 지표라는 정부 주장은 궤변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비 증가율이 “우리의 재정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외교부 3월 9일 보도자료)이라고 하면서 국방비 증가율 연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차관은 3월 10일 백브리핑에서 국방비 증가율이 “객관적 국력 지표”이고 “국력에 걸 맞는 분담이 중요하다”고 강변했다.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은 2018~2021년 사이 한국이 7.0%이고 일본이 1.1%다.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이 일본보다 6배 이상 많다. 정부의 논리대로 하면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킨 것은 재정수준과 국력이 되기 때문이고 일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재정수준도 국력도 안 되기 때문이다. 서천 소도 웃을 일이다.

일본이 주일미군 경비를 분담하기 시작한 1987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의 방위비분담금은 1.8배 오르는데 그쳤다. 반면 한국은 일본보다 4년 늦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해 왔지만 2021년까지 무려 11배나 올랐다. 방위비분담금 인상률로 보면 우리 국민의 부담정도는 일본에 비해 훨씬 무겁다. 이것은 한국이 재정수준이나 국력이 일본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미국 퍼주기가 극심하다는 뜻이다. 국력에 걸 맞는 부담이라는 궤변으로 이번 특별협정의 굴욕적인 미국 퍼주기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2020~2025년 기간에 방위비분담금으로 8.1~8.7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이 2020~2025년 사이 미국에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은 2020년 1조 4,696억 원(누락된 4,307억 원 포함시), 2021년 1조1,833억 원, 2022년 1조

2,472억 원, 2023년 1조3,233억 원 2024년 1조4,040억 원, 2025년 1조4,896억 원에 이르며 이를 합치면 8조1,170억 원이다. 이 금액은 2021~2025년 사이에 한국이 과거 미지급금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이다.

만약 과거 미지급금을 협정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지급하는 경우(한국이 미지급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지만 정부가 이를 지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2020~2025년 사이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8조6,850억 원에 이른다. 한국은 2025년까지 매년 평균 1조3,528억 원~1조4,475억 원을 미국에 지급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을 제외하고서도 2018년 기준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직간접지원액은 약 2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무기 및 미국에서의 해외정비(수리부속구입,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하면 2021년 기준으로 5조원에 달한다. 한국은 미국에 매년 대략 8.4조원을 퍼주는 셈이다.

5. 한국이 직접 방위비분담금의 소요를 심사하고 결정, 집행하자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제도개선 요구가 철저히 무시되었다.

정부는 제도개선의 성과로 “특별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의장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참석을 명문화”(외교부 보도자료, 3.9)한 것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소요 판단이나 사업선정, 자금배정 등을 주한미군이 결정하는 반주권적 결정방식이나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인 집행 관행을 고치는 것이 제도개선인데 정작 개선된 제

1) 국방부는 2019년 12월 현재 미지급현물지원분이 9,989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중 2020년에 4,309억 원이 지급됐다고 치고 나머지 5,682억 원이 5년간 분할되어 지급된다고 가정한다.

도 내용은 전무한 채 논의기구의 운영방식 개정을 제도개선인양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배척하지 못하고 시종일관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합동실무단 공동의장의 격이 국장급으로 높아지고 관계부처가 참석한다고 해서 미국이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할리 만무하다.

국회는 2007년 7차 특별협정 심사 때 방위비분담금의 평택미군기지이전비 전용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국회에서 2014년 9차 특별협정 심사 때 정부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취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조치(과세 또는 회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지금도 미국은 이자수입을 얻고 있다.

10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심사 때 국회가 제도개선을 요구한 주둔비용 전액부담 금지,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 미군 비용 불법 부담 금지, 역외 미군 장비 정비 지원 폐지,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 사용 금지도 그 어느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10차 협정 비준심사 때 국회는 총액형의 소요형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군사건설사업의 경우 사업 선정부터 최종 승인까지 전부 주한미군사령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한국 돈으로, 한국 방어를 위해 시행되는 군사건설 사업이므로 한국이 소요 선정과 우선순위, 최종 승인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이런 반주권적인 총액형 제도를 한국이 소요를 결정하고 타당성이 없는 소요제기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집행도 한국 정부가 직접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소요형으로 바꾸어야 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 방위비분담의 반주권적 결정방식과 집행의 불법성을 개선하는 유일한 길은 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부결뿐이다.

6.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수행에 쓰는 것은 불법이다.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최대한의 방위비분담금을 갈취하려는 이유는 남한 방어를 넘어 역외 신속기동군으로서의 임무가 전면화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대중 봉쇄 전략 수행 비용을 충당하려는데 있다.

신임 라케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5월18일 상원인준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역외(한반도 밖) 비상상황과 지역적 위협 대응을 지원할 옵션을 구성하게 될, 다양한 능력을 제공할 독특한 위치에 있다"면서 "내가 인준을 받으면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과 목표를 지원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상황과 작전 계획에 주한미군의 군대와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작전 계획에 따라서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대중국 작전을 수행할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언론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고공 정찰기 U-2S가 대만해협 인근 동중국해 상공 12km를 정찰 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세 번째 대만해협 출격"(연합뉴스, 2021.2.3.)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성주 사드기지도 성능개량을 통해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영 및 북한 및 중국의 장거리미사일로부터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지키는 기지로 전면화되고 있다. 라케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의 증언은 이런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수행이 곧 전면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방위비분담금(군수지원비)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차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미군 장비 정비나 주일미군 항공기 정비 등에 쓰여 왔다. 이로 미루어 방

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 수행에도 쓰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미 국방부의 군사건설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2019년 방위비분담금이 U-2S 정찰기가 소속된 5정찰대대(오산 공군기지)의 항공기 격납고 공사에 140억 원이 쓰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이미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에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주둔군 지위협정)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국 영역 방어에 한정하고 있다. 한국 방어 임무가 아닌 대중국 임무를 수행하는 주한미군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소파 위배다.

7. 국회는 거짓과 치욕의 제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제11차 특별협정은 대국민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고, 역대 정부가 체결한 그 어떤 특별협정보다도 미국 퍼주기를 보장해 주는 협정이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가 입는 재정적·경제적 피해와 정치적 타격은 실로 가늠하기 어렵다.

11차 협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조약 비준동의권은 무력화될 것이며 국회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다. 반면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해 온 정부의 횡포와 독단은 견제 받지 않은 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미국 퍼주기가 극에 달한 11차 협정이 국회를 통과해 8~9조원을 미국에 퍼준다면 파산 또는 실직 위기에 처해있으면서도 턱없이 부족한 지원 때문

에 고통 받고 있는 수백만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및 특수직 노동자들을 지원하는데 쓸 수 없어 그 피해를 우리 국민과 경제가 고스란히 지게 된다.

미국 정부의 갈취가 극에 달한 11차 협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주한미군의 경비를 최대한 한국에 전가하고 그럼으로써 절약되는 재원을 세계패권 비용에 쓰려는 미국의 횡포와 갑질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앞으로 파상적으로 닥치게 될 대중 봉쇄와 포위를 위한 미국의 재정적·군사적·경제적 기여 요구도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속임수와 불법으로 점철된 11차 특별협정이 통과된다면 정부의 시종일관한 대미 저자세와 미국 퍼주기로 망가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11차 특별협정이 최악의 미국퍼주기 협정으로 미국의 갈취가 극에 달한 협정으로 타결된 데는 국회의 책임이 실로 크다.

그간 국회는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역대 어느 정권에 대해서든 거수기로 전락하였다.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과 조약 비준동의권을 침해해 법적 근거 없이 방위비분담금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되풀이해 왔는데도 이를 방조하였다. 또 국회는 미국의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이를 이용한 이자놀이, 평택미군기지 이전비 및 사드 기지 공사비로의 군사건설비의 불법전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눈감아왔다.

이번에야 말로 국회가 11차 특별협정을 과감히 부결시킴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 예산결산심의 확정권과 조약 비준동의권을 무력화시키는 횡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막고 바이든 정부가 우리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감

히 갈취와 횡포의 엄두를 내지 못하게 경종을 울리고, 8~9조 원에 달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줄여 국가적 재난극복에 돌릴 수 있게 하고, 제11차 특별협정의 기만과 미국 퍼주기로 망가진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성과, 문제점, 개선 사항, 통과 필요성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박 원 곤

1. 성과

전년 대비 13.9% 증액된 1조 1,833억원(2021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교적 성공적 협정으로 평가한다. 첫째, 2021년도 실제 증가율은 7.4%로서 한 자리 숫자이다. 나머지 6.5%는 외교부 설명대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에서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할 최저배정비율을 75%에서 87%(의무적 지급 85% + 추가 지급 노력 2%)로 확대한 것에 대한 증액분이 반영”된 것이다.¹⁾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분을 증대하는 것이 안정적 근로 여건, 분담금 환류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 관련하여 협상 공백시 선지급 가능 규정을 명문화한 것도 성과로 판단한다. 무급휴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니지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최초 인상액 500%, 최종 50% 인상을 감안할 때 한 자리 숫자로 2021년도 인상분에 합의한 것은 성과이다. 이번 협정은 유효기간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의 다년이다. 2020년 3월 한미 당국은 최종적으로 13.9% 인상에 합의하였지만, 미국 내 최종 보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50% 인상을 고수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더불어 2019년도 총액을 전혀 인상하지 않고 1조 389억원으로 동결한 것은 절감 효과가 크다. 만약 2020년 잠정안인 13.9% 인상

1) 외교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Q&A(안), 2021.3.9.

분을 2020년도부터 적용하였다면 증가분이 확대된다.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지불액이 동결되어 약 3,143억원이 절감되었다.

셋째, 기존 SMA 틀을 유지하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반도 외부 미군 전력에 대한 정비 비용 및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부담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지적과는 달리 미국의 요구가 SMA 협정 위반은 아니다. 법률적으로 한미가 합의하면 SMA에 새로운 항목 첨부가 가능하다. 한국을 비롯한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은 SOFA를 체결하는데, 한미가 합의한 1966년 SOFA 5조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하여 한국은 시설·구역을 제공하고 미국은 주둔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한미는 1991년 SMA를 체결하여 예외가 가능케 하였다. SMA 공식 명칭 자체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협정’이다. SOFA 5조에 대한 예외조항(특별조치)을 둘 수 있는 특별법 형태이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한미가 합의하면 예외 조항을 만들 수 있고, 기존 SMA의 3개 항목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¹⁾

SOFA 5조가 기본적으로 미군 주둔비용을 규정한 것이고 SMA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SMA에 주둔비용 이외의 항목이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SMA 취지와 목적 차원, 즉 도의적인 차원에서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나 한미가 합의하면 의미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SOFA 5조 1항을 보면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고 되어있다. SMA가 이에 대한 예외(특별조치)이므로 주둔비용으로 국한하지 않고 ‘미군 유지’에 따르는 경비로 확대된 해석도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었다. 또, SMA 자체가 SOFA 기본정신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1) 박원근,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협정 협상: 경과, 쟁점, 전망과 대응,” 『이슈브리프』아산정책연구원, 2020.4.9., p. 11.

항목이 추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역시 지나치게 경직적 해석이다. 예를 들어 미군의 순환배치 비용도 미군을 타 지역에서 한국으로 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미군 유지비용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한미가 합의하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역으로 한국이 거부하면 합의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2. 문제점

이번 11차 합의에서 가장 문제점은 연간 증가율을 전년도 한국 국방비 예산 실제 증가율과 연동한 것이다. 이전 합의는 다년일 경우 연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규정하였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5차, 6차와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전 협정 대비 인상률은 한자리 숫자다. 특히 5년 다년 협상을 맺은 8차, 9차의 경우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15년 연평균 2.1%이므로 상한선 4% 안에서 인상된 바 있다.

<표> 이전 협정 대비 분담률 증액 추이²⁾

협정 차순	시작 연도	이전 협정 대비 인상률
2차	1994	18.2%
3차	1996	10%
4차	1999	8.0%
5차	2002	25.7%
6차	2005	- 8.9%
7차	2007	6.6%
8차	2009	2.5%
9차	2014	5.8%
10차	2019	8.2%

2)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합의 타결" 외교부 보도자료, 2019.2.10.

반면 이번 경우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한 인상율은 아래 표와 같이 예상된다. 이전 다년 협상과는 달리 최소 5.4%에서 최대 6.3% 인상될 전망이다. 이 경우 2025년 한국 분담금 규모는 1조 4,925억에 육박하여 2021년 1조 1,833억원에 비해 3,092억원 인상된다.

<표> 연간 인상율 추정(치)³⁾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총액 (억원)	10,389	11,833	12,472	13,258	14,040	14,925
증가율	0%	13.9%	5.4%	(6.3%)	(5.9%)	(6.3%)
적용 기준	-	7.4%+6.5%	국방비 예산 실제 증가율	「'21 - '25 국방중기계획」상 예상 증가율 (잠정 수치로 추후 국방비 예산 실제 증가율 적용)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국방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그 성격도 국방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바, 우리 국방예산 증감과 방위비 분담금 증감을 연동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고 설명하지만,⁴⁾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 한국 국방예산이 증대되면 한국 방어의 한국 책임이 증대되는 것이므로 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밝히는 또 다른 이유는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분(8.2%)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하였던 전례도 고려”하였다고 하나,⁵⁾ 2019년은 매우 예외적인 단년 협상으로 전례가 되기 어렵다. 한국과 더불어 유일하게 SMA를 체결하는 일본의 경우 2021년 2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2% 늘어난 2017억엔(약 2조1000억원)에 합의한 바 있다.

3) 외교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Q&A(안)”

4) 상계서

5) 상계서

3. 개선 사항

기존 한미가 시행하는 ‘총액제’를 미일이 채택하고 있는 ‘소요충족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소요 충족형은 현 정부에서도 인정했듯이 “지원의 합리성과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⁶⁾ 반면 총액제는 산출 방법이나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 그런데도 한국이 총액제를 고수했던 것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 비용을 우려해서였다. 그러나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상황이므로 더는 미국이 과다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소요가 소멸하였으므로 소요충족형 협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건설에 방위비 분담금 군사건설비가 사용된 바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 정부가 일본처럼 한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파견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⁷⁾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 정부는 고용주로서 고용계약, 급여지급, 근로조건, 인사조치 심사 등을 담당하고, 주일미군은 사용자로서 필요 인력 발의, 지휘·안전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⁸⁾ 일본은 노무관리를 원활하게 하려고 2002년 독립행정법인인 주둔군근로자노무관리기구(LMO)를 설립하였고, 약 2만 3천 명의 주일미군 일본인 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 287명 규모의 조직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에 적용한다면 1만 2천 명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관리를 위해 1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⁹⁾ 2012년 일본이 본부와 7개 지부, 관리 인원 303명을 유하기 위해 사용한 예산이 32억엔 이므로 절반 수준인 한국에 개략적으로 대입한다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15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¹⁰⁾

6) 상계서

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2&aid=0002122725>;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4062700004?input=1195m>

8) 『한·미 방위비 분담 관련 사안 연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7.5.31.), p. 71.

9) 신다윗 안석기, “한국과 일본의 주둔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리제도 비교 연구,” 『국방정책연구』제35권, 제4호, 2019년 겨울호, pp. 213.

더욱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기지 재편, 주한미군 수와 역할 변화 등으로 수요 변동이 잦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들의 신분을 어떤 수준으로 보장하고, 해고 시 직업훈련 또는 특별지급금 등의 후속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시행한다면 전체 예산과 관리수준, 신분 보장 정도 등 다방 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¹¹⁾

4. 통과 필요성

가. 방위비 분담에 대한 기본적 이해

원칙적으로 방위비 분담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일종의 보험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을 고도화하고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과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한국 안보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한미동맹 유지와 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하다.

주한미군의 장비나 전력의 가치를 현금가로 대체할 경우 20조~30조 가량의 추가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주한미군 장비 대체시 비용평가¹²⁾

구 분	장비 가치	대체 비용	GDP 대비 국방비
국감 자료	140~259억 달러	300억 달러	
통일연구원	235억 달러	290억 달러	
한국국방연구원	-	200억 달러	5~6%
전경련	-	192억 달러	2.91~3.57%

10) 『한·미 방위비 분담 관련 사안 연구』 pp. 68-72.
 11) 박원곤,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협정 협상,” p. 14.
 12) 『한·미 방위비 분담 관련 사안 연구』

주한미군이 보유한 정보 자산 가치는 약 22~25억 달러, 전시 증원 전력의 경우 약 2,500억 달러 가치로 판단된다. 주한미군의 장비 자산 가치는 한미연합장비 자산 가치의 2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더불어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되는 비용의 대부분이 한국인 고용원의 인건비와 한국업체에 의한 군사 건설비로 사용되므로 90% 이상 국내로 환원된다.¹³⁾ 트럼프 행정부 국방관인 마크 에스퍼도 현직일 때 유사하게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 90%는 한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¹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전액 한국인 근로자에게 원화로 지급된다. 군사건설비는 미측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설계·감리비 12%를 제외하고 모두 (88%) 한국 건설업체에 지급된다. 군수지원비도 전액 한국업체의 군수지원 용역 대금 지불에 사용된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은 지급되는 순간 미국 소유가 아닌 한미가 공통 목표를 위해 사용되는 자금이다. 한미가 공동으로 자금을 각출한 상태에서 한국의 몫을 늘리고 있는 것이 바른 해석이다.¹⁵⁾

한국이 지급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여전히 40%대를 넘지 않고 있다. 미국이 내는 비용이 여전히 크다는 의미이므로 현 분담금 지급을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 미국은 이전의 '비인적주둔비용'(Non-Personal Stationing Cost: NPSC)을 '비인적비용'(Non-Personal Cost: NPC)으로 바꿔 적용하고 있다.¹⁶⁾ 비인적주둔비용은 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반면 비인적비용은 역시 미군의 인건비는 제외하나 주둔이라는 단어를 뺌으로써 보다 확장된 비용 산정을 가능하게 했다. 특정 국가에 주둔할 때 발생하는 직접 비용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미군 유지·운용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을 포

13) 외교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Q&A(안)."

14) Kim Gamel, "South Korea should pay more for US troops by year's end, Esper says," *Stars and Stripes*, November 15, 2019.

15) 박원곤, "한미 방위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소고," 『한국국가전략』10호, 2019.7., p. 169

16) Uri Friedman, "America's Alliance System Will Face One of Its Biggest Tests Yet," *The Atlantic*, May 23, 2019; Se Young Jang, "US-South Korea military negotiations could cost the alliance," EASTASIAFORUM, Feb, 13, 2019.

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가 상정한 주한미군 비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¹⁷⁾

<표> 주한미군 비용¹⁸⁾

(단위: 백만 달러)

회계연도	인건비	운영/유지	군사건설	주거	회전자금	총액
2018	1,942.4	2,247.0	53.0	75.5	1.3	4,319.2
2019	1,999.1	2,203.7	17.5	203.8	1.3	4,425.4
2020	2,104.0	2,218.1		140.8	1.3	4,464.2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NPC)은 회계연도 2018년에 23.8억 달러, 회계연도 2019년은 24.2억 달러, 회계연도 2020년은 24.3억 달러다. 미국이 항목별 비용 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므로 자세한 명세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한국의 2019년 분담금이 1조 389억 원(9.4억 달러, 1달러 1,100원으로 계산)이므로 미군 인건비를 제외하고 미국이 상정한 총비용인 24.2억 달러의 약 39%에 해당한다. 여전히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60%를 감당한다.

나. 한미 동맹 전반에 대한 이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한 과다팽창, 경제 양극화, 인종 갈등, 민주주의 기능이상 등으로 인하여 중산층 삶을 보장하는 대신 미국이 세계 문제에 개입하는 사회적 계약이 약화하였다. 그 결과 1945년 이후 구축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트럼프즘이 등장하였으나, 미 주류를 이끄는 현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기반한 대외정책으로 복귀하려 한다. 다만, 미국은 상대적 국력 쇠퇴로 인하여 동맹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17) 박원곤,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협정 협상," p. 9.

18)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Operations and Maintenance Overview Fiscal Year 2020 Budget Estimates," March 2019, pp. 180-182.

한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인 자유무역, 다자협력, 세계화, 동맹 등을 통해 안보와 번영을 구가해 왔다. 특히 미국이 주도해 온 동맹 네트워크는 현존하는 북한 위협은 물론 역내 안정자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복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

국력에 맞게 한국은 동맹관계에서 비용과 책임은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은 충분한 책임과 비용을 감당하고 적극적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동맹 관련 역사 사례와 이론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나은 선택임을 표명하고 있다.¹⁹⁾ 동북아가 19세기적 갈등을 청산하고 유럽처럼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가능성은 미약하다. 이 의미는 여전히 전통적 세력균형에 따른 군사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미 역내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보존하고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해 있고, 동아시아 세력 변화를 추구한다. 본격적 군사 충돌의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무력을 기반으로 한 19세기 형태의 이른 바 ‘함포외교’와 같은 수단이 보다 본격적으로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²⁰⁾ 이 경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통합국력 차원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들을 상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 단독으로는 이들 강대국 힘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 동아시아의 서열에 하위에 위치하거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이들 국가의 세력 다툼의 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다양한 위협에 대해 치밀히 준비하되 동아시아 세력 재편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동반자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경을 맞대지 않고 영토적 야심이 없는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이자 정치체제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이 한국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이 지속 주둔함으로써 중국과 일본에 대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²¹⁾

19) Stephen M. Walt, *The Origin of Allianc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20) 하영선 편저,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동아시아연구원, 2007), p. 60.

21) 박원곤, “한미동맹 미래 구상: 지휘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국방연구』57권, 3호, 2014.9, p. 1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진술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우 정 업

1. 협정 내용 검토

트럼프 대통령 정부 시절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바이든 정부 들어 비교적 장기 계약으로 이른 시간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가. 방위비 증가액 계산 방식에 대한 의문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비준동의안에 따르면, 2020년 1조389억원, 2021년 1조 1,833억원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지원분에 전년도 우리나라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여 증액하기로 합의한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올해 방위비 증가분에 대한 설명은 전년 대비 13.9%가 증가했다는 것인데, 그 13.9%가 도출된 이유가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을 더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방식의 증가분 계산이 총액형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방식에서 논리적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됨.

나. 작전 지원 등 항목 관련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은 10차 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작전지원 (Operational Support)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규 항목 추가 제안을 철회하게 하고 기존 3가지 지원항목으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 합의에서는 이러한 의견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다. 이행약정 4.4.다 관련

이행약정 제4절 제4호 다항 관련하여,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측이 건설하여야만 하는 시설물의 경우 우리 업체의 참여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바, 미측 입장을 고려하여 현물 지원 원칙을 유지하면서 비한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계약 감독 및 비용 산정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앞으로 소요형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경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 산정 및 계약 감독은 더욱 중요함.

라. 미집행분에 대한 정보 공유 관련

2019년 협정을 통해 미집행 현금의 축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미집행 현물지원분에 대한 이월 요건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문제는 미측의 세부적인 배정계획이나 연도별 예상 소요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 또 앞으로 확보 가능한지, 그에 대한 대비 규정이 있는지가 될 것임.

정치적으로 특히, 분담금 미집행 현금을 예치금으로 한 이자 소득 발생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과 그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충분히 협의되어야 할 것임.

6절의 정보 공유관련, 이것이 실제 어떻게 이행되느냐 여부를 추후 살펴볼 필요 있음.

마.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및 합동실무단 관련

지난 합의에서 이어진 제8절 현행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합동실무단의 구성은 앞으로 단순히 총액을 논의하는 것 뿐 아니라, 분담금 결정 방식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협의가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그러나, 지난 협상에서 합의된 이 합동실무단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지난 2020년을 돌이켜보면 실무 협상단간의 협상이 한쪽 정부의 정치적 이유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례가 있는만큼, 이 합동실무단과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3. 결론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은 앞으로도 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행 총액형 방식과 소요형 방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단, 방위비 분담률 산정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총비용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양국이 어떠한 합의를

할 것인가가 향후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

5년이라는 시간을 번 만큼 앞으로협상에서는 이 주한미군 주둔 총비용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미국 측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Ⅲ. 참고자료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의안 번호	9425
----------	------

제출연월일 : 2021. 4. 1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동맹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원분은 인건비 부담, 군수비용 부담 및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됨(안 제1조).

- 나. 우리나라의 지원분은 2020년 1조389억원, 2021년 1조1,833억원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지원분에 전년도 우리나라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여 증가됨(안 제2조).
- 다.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시 2020년 인건비 분담 지원분 3,144억원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것과 나머지 비용 분담 항목에 해당하는 2020년 지원분이 이월된다는 것을 인정함(안 제2조).
- 라. 인건비 분담은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 지원 및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지되, 이 중 현금 지원분은 사업설계와 시공감리에 사용됨(안 제3조).
- 마. 우리나라는 미합중국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이 협정 종료 후 최대 1년 동안 이 협정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 인건비 분담 배정 금액을 한도로 인건비 분담 지원분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5조).
- 바. 당사자는 현행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국장급 인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합동실무단을 계속하여 운영함(안 제6조).
- 사.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안 제7조).

참고사항

가. 입법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예산조치 : 2020년 및 2021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되었음

다. 체결경위

○ 2019. 9. ~ 2021. 3. 제1차 ~ 제9차 협의 등

○ 2021. 3. 18. 최종 문안 합의

○ 2021. 4. 6. 제14회 국무회의 심의

○ 2021. 4. 8. 서명(서울)

라. 참고자료 : 특별조치협정을 위한 이행약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
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에 정부가 비준하도
록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붙임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이후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중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제5조와 관련하여,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하고 상호적인 공약이라는 목표를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이하 “군사건설”이라 한다)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협정의 이행은 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하도록 의도된 당사자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에 따른다.

당사자는 이 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2조

이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을 결정한다. 2020년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1조389억원이다. 2021년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1조1,833억원이다. 2022년, 2023년, 2024년 및 2025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전년도 대한민국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여 증가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2021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2022년, 2022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2023년, 2023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2024년, 그리고 2024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2025년 지원분에 적용된다.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시 2020년 인건비 분담 지원분 3,144억원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것과 나머지 비용 분담 항목에 해당하는 2020년 지원분이 이월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3조

인건비 분담은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군사건설은 현금 지원 및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군사건설 현금 지원분은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에 사용된다.

각 연도의 인건비 분담금은 3회 균등 분할하여 해당 연도의 4월 1일 이전, 6월 1일 이전, 그리고 8월 1일 이전에 지급된다. 군사건설 지원분 중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비는 각 연도의 3월 1일에 지급된다. 2021년의 경우 인건비 분담 지원분과 군사건설 지원분 중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비의 지급 시기는 상호 합의에 기초해 결정한다.

연도 말에 현물 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그러한 지원분은 이 협정의 이행 약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미집행 지원분의 최소화를 위해 절차 수립을 포함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4조

현물 지원분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세금을 공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물자, 보급품, 장비 또는 용역에 대해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 지불은 비용 분담 재원으로

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5조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 협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미합중국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이 협정 종료 후 최대 1년 동안 이 협정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 인건비 분담 배정 금액을 한도로 인건비 분담 지원분을 지급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인건비 분담 지원분이 인건비 분담 지원분을 다루는 후속협정에 명시되는 대한민국의 지원분 총액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의도한다.

제6조

당사자는 현행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국장급 인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합동실무단을 계속하여 운영하며, 합동실무단은 공동의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대한민국 외교부 및 국방부, 미합중국 국무부 및 국방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당사자의 관계당국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다. 합동실무단의 임무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이행약정에서 정한다.

제7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외교경로를 통해 서로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협정은 나중의 서면 통보일자에 발효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과 이 협정의 발효일 사이에 이행되어야 하는 모든 의무에 한해서 당사자는 그러한 의무가 이행되었는지에 대해 상호 협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의무 이행 기한을 상호 결정한다.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년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비용 분담 지원분 또는 군사건설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당사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자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해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 수정되고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4월 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have agreed to take the follow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igned at Seoul on July 9, 1966, as amended, which sets forth the principles on the sharing of expenditures incident to the maintenance of the U.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recognition of the goal of a strong and mutual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of America alliance:

Article I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ar, for the duration of this Agreement, as a special measure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a part of the expenditures associated with the stationing of the U.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ategorized into Labor Cost Sharing, Logistics Cost Sharing, and Republic of Korea-Funded Constru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ROKFC”).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a separate Implementation Arrangement between the concerned authorities of the Parties which is intended to enter into force on the same date as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put in utmost efforts to enhanc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f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II

This Agreement shall determine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2020 through 2025.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2020 is 1.0389 trillion Korean Won.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2021 is 1.1833 trillion Korean Won. The 2022, 2023, 2024, and 2025 contributions shall be determined by increasing the contribution of the previous year by the ROK defense budget increase rate of the previous year. The 2021 defense budget increase rate shall be used for the 2022 contribution, the 2022 rate for 2023, the 2023 rate for 2024, and the 2024 rate for 2025.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at the tim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for 2020 have already been provided in the amount of 0.3144 trillion Korean Won, and 2020 contributions for the remaining cost-sharing categories shall roll over.

Article III

The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shall consist of cash, and the Logistics Cost Sharing contributions shall consist of in-kind contributions. ROKFC contributions shall consist of cash and in-kind contributions. Cash contributions for ROKFC shall be for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Each year's Labor Cost Sharing payments shall be made in three equal payments on or before April 1, June 1, and August 1 of that year. The costs of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for ROKFC contributions shall be paid on March 1 of each year. For 2021, the time of payment for the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and the costs of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for ROKFC contributions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mutual agreement.

If in-kind contributions remain at the end of the year, those contributions shall roll over to the next year unless specified otherwise in the Implementation Arrangement of this Agreement.

The concerned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put in their utmost efforts, including establishment of procedures, to minimize unexecuted contributions.

Article IV

All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and services provided as part of the in-kind contributions shall be exempt from Republic of Korea taxes, or provided on an

after-tax basis. Such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and services procur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exempt from individual consumption taxes and value added taxes. In the case of value added taxes, the zero rate shall be applied. If taxes are levied against any such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or services, payment of such taxes shall not be made from cost-sharing funding.

Article V

The concerned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endeavor to enhance the welfare and well-being of the Korean national workforce of U.S. Forces Korea.

Notwithstanding Article VII of this Agreement, the Republic of Korea may provide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upon a written request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a period of up to one year after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nd up to the allocated amount of Labor Cost Sharing for the last year in which this Agreement is in force. The Parties intend for any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provided under this Article to constitute a part of the total amount of contrib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identified in a subsequent agreement addressing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Article VI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current Special Measures Agreement system,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operate a joint working group that shall be co-chaired b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Forces Korea at the Director-General level and meet at the request of the co-chair. When deemed necessary by both Parties, representatives from the concerned authorities of the Par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Department of State and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y attend. The specific details pertaining to the mission and operation of the joint working group shall be determined in the Implementation Arrangement.

Article VII

The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at their respective domestic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eted and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date of the last written notification with effect from January 1, 2020.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December 31, 2025, unless extended by mutual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To the extent this Agreement requires any obligation to have been fulfilled between January 1, 2020 and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the Parties shall consult with each other regarding whether that obligation has been fulfilled

and, where necessary, shall mutually determine a new date by which to fulfill the obligation.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carrying out of any Logistics Cost Sharing contributions or ROKFC projects that are selected every year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procedures under this Agreement, and not fully executed as of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VIII

The Parties may consult on all matters regarding this Agreement through the Joint Committee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Article XXVIII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or through the Joint Cost-Sharing Committee, which is composed of representatives appointed by the Parties.

Article IX

This Agreement may be revised and amended by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Such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pursuant to the process provided in Article VII.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for the purpose,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Seoul this eighth day of April 2021, in duplicate,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군사건설 등 주한미군 주둔에 수반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 대상기간 : 2020년 ~ 2025년 (6년간)
- 전액 원화 집행
- 2020년 / 2021년 지원분 : 1조 389억원 / 1조 1,833억원
- 2022년 ~ 2025년 지원분 : 전년도 지원분에 전년도 대한민국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여 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연 도		2020년	2021년	2022~2025년
지출	총 3개 항목 (①인건비 분담, ②군사건설, ③군수비용 분담)	10,389	11,833	전년도 지원분 + (전년도 지원분 × 전년도 대한민국 국방예산 증가율)
	소 계 (a)	10,389	11,833	미정
수입	-	-	-	-
	소 계 (b)	-	-	-
□ 총 비용(a-b)		10,389	11,833	미정

4.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5. 작성자

○ 외교부 북미국 한미안보협력과(한미 방위비분담협상T/F) 허미경
외무사무관 (02-2100-8559)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지출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2025년	계
총 액	10,389	11,833	전년도 지원분 + (전년도 지원분 × 전년도 대한민국 국방예산 증가율)	미정
총 3개 항목 (①인건비 분담, ②군사건설, ③군수비용 분담)				

○ 분담 항목별 세부 내용

- 인건비 분담 :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급료와 후생복지비) 분담
- 군사건설 : 탄약고, 활주로 등의 전투시설과 병영, 행정

시설 등 非전투시설 건설 지원

- 군수비용 분담 : 탄약 저장, 항공기 정비, 차량·장비 구입, 수송 지원 등 용역 및 물자 지원

2. 수입

- o 해당사항 없음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

비준동의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연 도	2020	2021	2022~2025년	합 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10,389	11,833	전년도 지원분 + (전년도 지원분 × 전년도 대한민국 국방예산 증가율)	미정
○ 일반회계	10,389	11,833	"	미정
○ 예비비	-	-	-	미정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	-	-	-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공공단체	-	-	-	-
<input type="checkbox"/> 민 간	-	-	-	-
<input type="checkbox"/> 합 계	10,389	11,833	전년도 지원분 + (전년도 지원분 × 전년도 대한민국 국방예산 증가율)	미정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방예산에 반영 추진

3.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협의사항

- 관련 정부 부처간 협의 및 정부예산안의 국회 승인

5. 작성자

- 외교부 북미국 한미안보협력과(한미 방위비분담협상T/F) 허미경
외무사무관 (02-2100-8559)

(참고자료)

특별조치협정을 위한 이행약정

전문

이 약정은 2021년 4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이하 “특별 조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데 사용된다.

이 이행약정의 목적상, 이하에서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국방부(이하 “국방부”라 한다)와 주한미군사령부(이하 “주한미군사”라 한다)를 집합적으로는 “당사자들”로,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고 한다.

제1절

배정액의 포괄적인 검토 및 평가

1.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는 관련 문서 및 자료를 기초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이하 “방공위”라 한다)를 통해 3개 분담금 항목별(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이하 “군수비용 분담”이라 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이하 “군사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주한미군사의 배정액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다.

2. 필요할 경우, 관련 사안은 추가 심의를 위해 한국 국방부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 간 협의에 상정될 수 있다.

3. 주한미군사는 배정 금액의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를 위해 늦어도 방공위 개최 2주 이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 경우 주한미군사는 배정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세부 자료를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가. 인건비 분담 관련 자료는 특별조치협정 재원으로 지원되는 고용원 수, 이들 인원에 대한 비용 추산치, 고용원 수와 임금의 확인된 변동사항에 관한 설명, 그리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인력운영계획서를 포함한다.

나. 군사건설 관련 자료는 사업목록 초안 및 간략한 사업설명서, 그

리고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 재원의 미집행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다. 군수비용 분담 관련 자료는 개별 사업목록을 포함한다.

4. 주한미군사는 방공위의 검토와 평가를 충분히 고려한 후 2020년과 2021년 각각에 대한 비용분담 항목별 배정액을 특별조치협정의 발효일부터 45일 이내에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5. 차기연도의 비용분담 항목별 배정액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가. 주한미군사는 집행연도의 전년도 3월 15일까지 3개 비용분담 항목별 추정되는 배정 금액을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나. 각 비용분담 항목별 배정액 고려시, 방공위는 인건비 분담부터 배정액의 검토와 평가를 시작한다.

다. 주한미군사는 인건비 분담의 최종 배정 금액을 가장 먼저 결정한다.

라. 주한미군사는 위에서 언급된 방공위의 검토 및 평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연도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최종 배정 금액을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제2절 지원 항목

한국의 특별조치협정 지원분은 원화로 지급되며, 다음 항목들에 배분된다.
(가) 인건비 분담(제3절), (나) 군사건설(제4절), (다) 군수비용 분담(제5절)

제3절 인건비 분담

1. 인건비 분담 지원분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2. 주한미군사는 특별조치협정 지원분의 상당부분이 인건비 분담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고용이 미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소요에 배치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용을 종료하지 않는다.

3. 군사상 소요로 인해 감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한미군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고용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4. 한국이 제공하는 지원분은 한국 내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료와 후생복지비를 위해서만 사용된다.

5.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한미군사는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전체의 최소 85퍼센트를 한국의 특별조치협정 지원분을 사용해 지급한다. 주한미군사는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전체의 최소 87퍼센트 또는 그 이상을 한국의 특별조치협정 지원분을 사용해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6. 주한미군사는 3월 1일 이전에 전년도의 연간 집행보고서를 한국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계획예산관)에 제공한다. 연간 집행보고서는 특별조치협정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은 고용원 수, 기관별 급여 분배 내역, 급여항목별 급여 분배 내역, 직책별 고용원 분포, 각 급여수준별 고용원 수, 월별 실제 임금 집행 내역, 고용원 수 및 임금수준 변동 설명과 같은 상세 내용을 포함한다.

제4절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군사건설)

1. 군사건설 프로그램은 현금 및 현물 지원 프로그램이다.

2. 한국 국방부가 제공하는 현금과 현물은 군사건설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에만 사

용된다.

가.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비는 연간 군사건설 배정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특정 연도에 배정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은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 재원은 차기연도의 군사건설 현금 배정액에서 삭감되며, 이에 따라 군사건설 총 배정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현물 배정액을 현금 감소액만큼 증가시킨다.

다.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 재원은 집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주한미군사는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를 책임진다.

4. 한국 국방부는 사업설계 과정에서 확인되고 발전된 사업 일정에 따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사업을 시행한다.

가. 모든 입찰 차액은 향후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나. 주한미군사는 설계시방서 및 수용 가능한 계약업체 목록을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다. 계약업체는 비한국 업체가 이용되어야 하는 특정 시설 건설을 제외하고, 미합중국 육군 공병단 극동지부가 사전에 선별한 계약업체 목록에서 선정된 한국 업체로 한다. 이러한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필요로 인해 요구되며, 이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정 시설에 대해 주한미군사는 계약 대상 업체를 결정하고, 계약문서 초안을 준비하여 최종 승인과 계약을 위해 한국 국방부에 제출한다. 공사감독 책임은 주한미군사에 위임된다.

5. 당사자들은 군사건설 지원분이 회관, 골프장, 극장 및 볼링장과 같은 위락시설들을 건설, 확장, 수리 또는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6. 적용되는 한국과 미국 표준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국산 자재가 사용된다.

7. 당사자들은 기획, 계획, 설계, 계약 및 공사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수의 인력을 군사건설 프로그램 및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8. 당사자들은 군사건설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이하 “합동협조단”이라 한다)을 계속하여 운영한다. 당사자들은 각자 적절한 고위급 인사를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의 공동의장으로 임명하며,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의 공동의장 또는 그들의 대리인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은 다음과 같은,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사안들에 관해 만나서 논의한다.

가. 사업 선정

(1) 주한미군사는 군사건설 합동협조단 협의를 위해 매년 4월 30일까지 한국 국방부에 가용한 사업설명서와 함께 건설 사업 목록을 포함한 군사건설 5개년 계획 초안을 제공한다. 이 군사건설 5개년 계획 초안의 기산점은 차기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2) 매년 7월 31일까지,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은 군사건설 5개년 계획 초안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3)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군사건설 5개년 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그러한 협의 결과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제공한다.

(4) 집행연도 사업은 승인된 군사건설 5개년 계획에 기초하여 주한미군사에 의해 일차적으로 선정되고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5) 주한미군사는 집행연도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집행연도 건설 사업 목록의 초안 갱신본, 초기 사업설계 목록 및 간략한 사업설명서를 한국 국방부에 제출한다.

(6) 한국 국방부는 미국의 군사적 필요와 공사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목록의 조정과 추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7)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은 집행연도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이러한 목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8)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집행연도의 전년도 9월 1일 이전까지 방공위에 상정될 수 있다. 해결되지 않은 경우, 그 사안들은 해결을 위해 집행연도의 전년도 10월 1일 이전까지 한국 국방부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상정될 수 있다.

(9) 위의 협의 및 조정에 기초하고 이를 반영하여, 주한미군사는 집행연도 최종 건설사업 목록을 집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까지 군사건설 합동협조단 회의에서 한국 국방부에 제출한다.

(10) 추가적으로, 주한미군사는 승인된 군사건설 5개년 계획을 집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에서 한국 국방부에 제출한다.

나. 사업수정 관리

(1) 사업 완료 지원, 추가 비용 발생 감소, 건설 일정 지연 최소화 및 개별 사업 범위의 수정 제한을 위해,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은 모든 군사건설 사업을 위한 적절한 전략이 준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획득 계획을 검토한다.

(2) 공사 집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한미군사는 한국 국방부를 설계 과정 전반에 걸쳐 관여시키며 최종 사업 설계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협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3) 더 나아가, 불필요한 공사 지연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들은 수정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여 일정 변경이나 비용 증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당사자들은 이행합의서에 이를 위한 절차와 시간계획을 마련한다.

다. 공사 계약 및 집행 보고서

(1) 현물 군사건설 프로그램으로 체결된 모든 공사 계약서 및 수정 계약서의 사본과 분기별 집행보고서는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을 통해 주한미군사에 제공된다.

(2) 군사건설 현금 지원분으로 체결된 모든 공사 계약서 및 수정 계약서의 사본과 분기별 집행보고서는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을 통해 한국 국방부에 제공된다.

(3) 분기별 집행보고서는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이 마련한 양

식에 따른다.

(4)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은 어떠한 계약 문서와 보고서들이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한다.

라. 집행 문제 해결

(1) 현물 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양 당사자가 판단하는 사업이나 사업들의 경우, 당사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을 통해 협의하고, 사업이나 사업들을 완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마. 긴급 소요

(1) 최종 건설사업 목록 수립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한미군사는 오로지 군사적 필요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연도 8월 31일까지 최종 건설사업 목록의 일부를 긴급 소요로 대체할 수 있다.

바. 환경

(1) 환경문제는 중요하다.

(2) 당사자들은 군사건설 지원분을 환경보호를 고려한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3) 새로운 건설에 군사건설 지원분을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과 일치하는 현재의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을 설계 및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사. 기타 문제

(1)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은 중요 사안들을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는 계약 분쟁, 시위 그리고 군사건설 프로그램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그러한 중요 사안에 대해 이를 알게 된 날부터 7 업무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수령한 날부터 15 업무일 이내에 그 사본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9. 군사건설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 따라 미합중국에 공여된다. 이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

게 되면 대한민국에 반환된다.

10. 군사건설 집행에 있어 당사자들의 책임은 별도의 이행합의서에 규정된다.

가. 당사자들은 특별조치협정 발효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이행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나. 이 항에서 언급된 이행합의서는 2019년 7월 3일 서울에서 서명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이행약정에 기초한 2019년도 현물대한민국지원건설 사업 이행합의서」를 대체하며, 기존 이행합의서는 이 이행합의서로 대체되기 전까지 특별조치협정 및 이 이행약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적용된다.

제5절

군수비용 분담

1. 군수비용 분담 지원분은 현물로 제공된다.

2. 군수비용 분담 프로그램에 따라,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한국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제공한다.

가. 한미 단일탄약군수체제(SALS-K)

나. 한미 항공탄약 공동관리 양해각서(MAGNUM)

다. 휘발유 기반 연료, 등유 및 윤활유 분배 및 저장

라. 수송 용역

마. 수리 및 정비용역

바. 가족주택을 제외한 합의된 특정 임차료

사. 기지운영지원의 일부 (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

아. 전쟁예비물자 유지

자. 차량, 장비 및 물자구입, 그리고

차. 시설의 유지 용역

3. 이 약정에 따른 군수비용 분담 사업의 이행에 있어 “한국 계약업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그 모회사를 포함하여, 한국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회사로서 그 국내적 지위가 회사 등기부등본 또는 그를 대체하는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실체. 모회사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으로 다른 회사의 기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실체로 정의된다. 또는,

나.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

4. 당사자들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의 개선, 군수비용 분담 프로그램에 따른 현재 및 향후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과정에 대한 공동 검토 수행 등 군수비용 분담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군수비용 분담 합동협조단을 계속하여 운영한다. 당사자들은 각자 적절한 고위급 인사를 군수비용 분담 합동협조단의 공동의장으로 임명하며, 군수비용 분담 합동협조단의 공동의장 또는 그들의 대리인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5. 집행연도에 집행할 모든 사업은, 집행연도 전년도 12월 15일 이전까지, 주한미군사에 의해 확정된 후 한국 국방부에 의해 승인된다.

가. 한국 국방부는 원래 사업목록이 집행연도 동안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수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나. 당사자들은 투명한 이행을 위한 사업 수정을 관리하고 군수비용 분담 미집행 지원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사는 (1) 승인된 사업 목록과 (2) 추후 수정 사항을 매 분기마다 최소 1회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6. 당사자들은 다음의 절차 및 내용에 따라 군수비용 분담 사업을 집행한다.

가. 주한미군사는 주한미군사가 공고하고 협상한 계약에 기초하여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발주한다.

나. 주한미군사는 계약 대상 업체를 결정하고, 계약문서 초안을 준비하여 최종 승인과 계약을 위해 한국 국방부에 제출한다.

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사의 최종 승인 요청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라. 이러한 기간 중, 한국 국방부가 승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에서 누락된 문서를 주한미군사에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한 자료 요청 시부터 제출까지의 기간은 제외된다.

마. 군수비용 분담 합동협조단은 한국 국방부의 승인 거절 이후 그 이견을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군수비용 분담 합동협조단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공위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바. 주한미군사는 각 사업에 대해 상호 간에 정해진 기간이 경과된 후 계약업체에 검수증명서를 발급한다.

사. 계약업체는 주한미군사에 송장을 제공하며, 주한미군사는 한국 국방부에 검수증명서와 송장 사본을 제공한다.

아. 연장 가능한 군수비용 분담 계약의 경우, 주한미군사는 한국 계약업체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매년 한국 국방부에 제출한다.

자. 어떤 계약업체가 한국 계약업체의 정의를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되는 경우, 해당 계약업체는 계약된 기간의 사업 수행은 완료하는 것이 허용된다.

7. 한국 국방부는 계약 또는 당사자들이 승인한 별도의 합의가 체결되었으나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제공되지 아니한 장비, 보급품 및 용역, 또는 사업연도 12월 1일까지 입찰 공고된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의 재원을 차기연도로 이월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입찰 공고가 되지 않은 군수비용 분담 잔여 재원은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공공요금으로 지출될 수 있다. 입찰 공고란 계약이 광고된 것을 의미한다.

8. 군수비용 분담 합동협조단은 중요 사안들을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는 계약 분쟁, 시위 그리고 군수비용 분담 프로그램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그러한 중요 사

안에 대해 이를 알게 된 날부터 7 업무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수령한 날부터 15 업무일 이내에 그 사본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9. 군수비용 분담 집행에 있어 당사자들의 책임은 별도의 이행합의서에 규정된다.

가. 당사자들은 특별조치협정 발효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이행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나. 이 항에서 언급된 이행합의서는 2019년 10월 22일 서울에서 서명된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간의 이행합의서」를 대체하며, 기존 이행합의서는 이 이행합의서로 대체되기 전까지 특별조치협정 및 이 이행약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적용된다.

제6절 정보공유

1. 정보공유 증진을 위해,

가. 주한미군사가 한국 국방부에 제공하는 자료의 양식은 제4절제8항다호(3)에서 특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공위에 의한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나. 한국 국방부는 항목별 배정액에 대한 방공위 토의 결과를 대한민국 국회와 공유할 수 있다.

다. 당사자들은 전년도 동안 각자가 개별적으로 집행 책임이 있는 전체 항목 지원분에 대한 「특별조치협정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를 준비하고, 이를 한미통합국방협의체(이하 “한미통합국방협의체”라 한다) 공동 의장에게 집행연도의 차기연도 4월까지 제출한다.

라. 주한미군사는 미집행된 군사건설 현금 지원분에 대한 상세 현황 보고서를 매년 2회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한국 국방부는 전체 군사건설 현물 지원분 중 지출되지 않은 현물 지원분에 대한 상세 현황보고서

를 매년 1회 주한미군사에 제공한다.

마. 한국 국방부는 위 보고서 및 그 밖의 정기 집행 보고서상의 정보를 군사 보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공유할 수 있다.

제7절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방공위)는 한국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다.

제8절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

1. 당사자들은 특별조치협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을 계속하여 운영한다.

가.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은 양 당사자의 실무급 인사와 각 당사자 정부의 대표로 구성된다. 각 측은 적절한 국장급 인사를 공동의장으로 임명한다.

나.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은 특별조치협정 발효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집되며, 특별조치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다.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은 최소한 연 2회 소집된다. 당사자들은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 회의 결과를 매년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 보고한다.

라.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의 의제는 현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각 당사자가 제안하는 사안으로 구성되며, 이는 대안적 접근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9절 발효, 유효기간 및 개정

1. 이 이행약정은 이행약정이 발효하기 위한 그들의 국내적인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당사자들 간의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 중 나중의 통보 일자에 발효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며, 특별조치협정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2. 이 이행약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과 이 이행약정의 발효일 사이에 이행되어야 하는 모든 의무에 한해서 당사자는 그러한 의무가 이행되었는지에 대해 상호 협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의무 이행 기한을 상호 결정한다.

3. 이 이행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 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될 수 있다.

2021년 4월 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과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를 대표하여
표하여

주한미군사령부를 대

IMPLEMENTATION ARRANGEMENT

FOR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Preamble

This arrangement shall be used to implement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of America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SMA”), signed on April 8, 2021.

For the purposes of this Implementation Arrangement,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ND”) and the U.S. Forces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USFK”) shall be hereinafter referred to collectively as “Parties,” and individually as a “Party”.

Section I

Comprehensive Review and Assessment of Allocations

1. ROK MND and USFK shall comprehensively review and assess the USFK allocation requirements for the three cost-sharing categories (Labor Cost Sharing, Logistics Cost Shar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LCS”), and ROK-Funded Constru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ROKFC”)), based on relevant documents and materials, through the Joint Cost Sharing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JCSC”).
2. When necessary, the discussion may be elevated to the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the USFK Commander for further deliberation.
3. For the comprehensive review and assessment on the amount of allocations, USFK shall provide relevant materials no later than two (2) weeks prior to the JCSC session. At this time, USFK shall provide the ROK MND detailed materials that can serve as a

basis for the allocations.

- a. Relevant materials for Labor Cost Sharing include the number of employees to be supported by SMA funds, the estimated cost of these employees, an explanation of known adjustments to the number of employees and pay, and the USFK Korean national workforce staffing authorization documentation.
- b. Relevant materials for ROKFC include the draft project list and brief project descriptions, and information on unexecuted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funds.
- c. Relevant materials for LCS include the individual project list.

4. USFK shall provide the ROK MND with separate allocations for 2020 and 2021 for each cost-sharing category after taking into full consideration of the review and assessment of the JCSC within 45 days of the SMA entering into force.

5. As for the allocations for each cost-sharing category for subsequent years, the following procedures shall apply.

- a. USFK shall provide the ROK MND the estimated amount of allocations for the three cost-sharing categories by March 15 of the year before the year of execution.
- b. When this allocation for each cost-sharing category is being considered, the JCSC shall review and assess the allocation beginning with Labor Cost Sharing.
- c. USFK shall determine the final amount of allocation for Labor Cost Sharing first.
- d. USFK shall provide the final amount of allocations to the ROK MND by July 31 of the year before the year of execution, taking into full consideration the aforementioned review and assessment of the JCSC.

Section II

Contribution Categories

The ROK SMA contribution shall be paid in Korean Won and distributed among the following categories: (a) Labor Cost Sharing (Section III); (b) ROKFC (Section IV); and (c) Logistics Cost Sharing (Section V).

Section III

Labor Cost Sharing

1.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shall be paid in cash.
2.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SMA contribution is provided for Labor Cost Sharing, USFK shall continue to endeavor to enhance the welfare and well-being of its Korean national workforce and shall not terminate employment unless there is just cause or unless such employment is inconsistent with the military requirements of the U.S. Armed Forces.
3. When military requirements make reductions necessary, USFK shall endeavor to minimize employee terminations to the extent possible.
4. Contributions provided by the ROK shall be used solely for salaries and benefits of the USFK Korean national employees in the ROK.
5. USFK shall use ROK SMA contributions for at least eighty-five (85) percent of the total labor costs of USFK's Korean national workforce, except in cases where the Parties agree through consultation. USFK shall endeavor to use ROK SMA contributions for at least eighty-seven (87) percent or more of the total labor costs of USFK's Korean national workforce.
6. USFK shall provide an annual execution report for the previous year to the Programming and Budgeting Bureau of the ROK MND (Director General of Programming and Budgeting Bureau) not later than March 1. The annual execution report shall include details such as the number of employees that received support from the SMA program, payment distribution by organization, payment distribution by pay category, distribution of employees by position, number of employees for each pay grade, actual payroll execution by month, and explanation of adjustments in the number of employees and pay.

Section IV

ROK-Funded Construction (ROKFC)

1. The ROKFC program is a cash and in-kind contribution program.

2. Cash provided by the ROK MND shall be used only for ROKFC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 a. The costs of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shall not exceed twelve (12) percent of the annual ROKFC allocation.
- b. A particular year's allocated, but unexecuted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funds, shall reduce the subsequent year's ROKFC cash allocation, thereby equally increasing the in-kind allocation, without reducing the total ROKFC allocation.
- c.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funds that are in the course of contract procedures shall be regarded as executed funds.

3. USFK shall be responsible for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4. The ROK MND awards construction contracts and implements construction projects in accordance with the corresponding timeline as identified and developed during project design.

- a. Any bid savings shall be used for future projects.
- b. USFK provides design specifications and a list of acceptable contractors to the ROK MND.
- c. Contractors shall be ROK companies selected from the 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 Far East District's Pre-Qualified contractor list except for the construction of specific facilities where non-Korean contractors must be utilized. The use of non-Korean contractors for the construction of specific facilities shall be available only in exceptional cases where the ROK MND and USFK agree through consultation that these specific facilities are required due to U.S. military needs and there is no sufficient cash reserve available for that purpose. For these specific facilities, USFK makes contract source selection decisions, prepares the contract drafts, and submits them to the ROK MND for final approval and award. Responsibility for construction management shall be delegated to USFK.

5. The Parties agree ROKFC contributions cannot be used to construct, expand, repair, or manage recreation facilities, such as clubs, golf courses, theaters, and bowling alleys.

6. Korean materials shall be us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provided they

meet applicable U.S. and Korean standards.

7.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apply the appropriate number of personnel to the ROKFC program and projects as necessary to seamlessly conduct programming, planning, design, contracting, and construction administration.

8.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operate the ROKFC Joint Coordinating Group (hereinafter referred to as “JCG”) to review and discuss the ROKFC program. The Parties each shall appoint an appropriate senior-level official to co-chair the ROKFC JCG, and the ROKFC JCG co-chairs or their representatives should convene meetings as required.

The ROKFC JCG shall meet and discuss the following, but not limited to, areas:

a. Project Selection

(1) By April 30 of each calendar year, USFK shall provide the ROK MND a draft ROKFC Five-Year Plan, including the construction project lists with available project descriptions for ROKFC JCG consultations. This draft ROKFC Five-Year Plan commences on January 1 of the next calendar year.

(2) By July 31 of each calendar year, the ROKFC JCG shall convene to review and discuss the draft ROKFC Five-Year Plan.

(3) The ROKFC JCG shall provide the USFK Commander the results of those consultations prior to the Commander’s approval of the ROKFC Five-Year Plan.

(4) Based on the approved ROKFC Five-Year Plan, projects for the year of execution shall be initially selected and prioritized by USFK.

(5) USFK shall submit an updated draft construction projects list, initial project design list, and brief project descriptions for the year of execution to the ROK MND by November 30 two years prior to the year of execution.

(6) The ROK MND may suggest adjustments to these lists and additional projects considering U.S. military needs and feasibility of construction.

(7) The ROKFC JCG shall conduct consultations on these lists by July 31 of the year before the year of execution.

(8) Concerns not resolved through the ROKFC JCG may be elevated to the JCSC no later than September 1 of the year before the year of execution. If

unresolved, those concerns may be elevated to the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the USFK Commander for resolution no later than October 1 of the year before the year of execution.

(9) Based on and incorporating the aforementioned consultations and coordination, USFK shall submit its final construction project list for the year of execution to the ROK MND at a ROKFC JCG session no later than October 31 of the year before the year of execution.

(10) Additionally, USFK shall submit its approved ROKFC Five-Year Plan to the ROK MND at the ROKFC JCG by November 30 of the year before the year of execution.

b. Change Management

(1) In order to support project completion, reduce cost overruns, minimize construction schedule delays, and limit changes in scope of individual projects, the ROKFC JCG shall regularly review acquisition planning to ensure appropriate strategies are in place for all ROKFC projects.

(2) In order to improve construction execution, USFK shall involve the ROK MND throughout the entire design process and the final project design shall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consultations conducted under that process.

(3) Furthermore, to curtail unnecessary delays in construction, the Parties shall expedite their review of change requests to minimize impact to schedule changes or cost increases. The Parties shall establish procedures and timelines for this in an implementing agreement.

c. Construction Contracts and Execution Reports

(1) Copies of all construction contracts and contract modifications awarded in the in-kind ROKFC program and quarterly execution reports shall be provided to USFK through the ROKFC JCG.

(2) Copies of all construction contracts and contract modifications awarded with the ROKFC cash contribution and quarterly execution reports shall be provided to the ROK MND through the ROKFC JCG.

(3) Quarterly execution report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format developed by the ROKFC JCG.

(4) The ROKFC JCG shall determine which contract documents and reports need to be produced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d. Execution Problem Resolution

(1) For a project or projects where it is determined by both Parties that in-kind procedures are not working, the Parties shall consult through the ROKFC JCG in an effort to resolve the problem, and take proper actions to complete the project or projects.

e. Emergent Requirements

(1) When and if a situation occurs that was not envisioned at the time of establishing the final construction projects list, USFK may substitute an emergent requirement into the final construction projects list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based solely on military needs through and until August 31 of the year of execution.

f. Environmental

(1) Environmental issues are important.

(2) The Parties shall make strong efforts to use the ROKFC contribution in constructing new facilities that take into account environmental protection.

(3) In applying the ROKFC contribution to new construction,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design and build facilities that meet current environmental standards consistent with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g. Other matters

(1) The ROKFC JCG shall consult and endeavor to address significant issu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ntract disputes, protests, and resulting litigation arising from the execution of the ROKFC program.

(2) One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any such significant issues within seven (7) working days of learning of the issue and provide the other Party copies of relevant documents within fifteen (15) working days of the receipt of such documents.

9. Facilities constructed under the ROKFC program shall be granted to the United States under Article II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The facilities shall be returned to the Republic of Korea when they are no longer needed for the purposes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10.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arties in the execution of the ROKFC shall be set out in a separate implementing agreement.

- a. The Parties shall make best efforts for this implementing agreement to be concluded within ninety (90) day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SMA.
- b. The implementing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supersede the Implementing Agreement for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In-Kind Projects under the Calendar Year 2019 Implementation Arrangement for Special Measures Agreement, signed at Seoul on July 3, 2019, which shall continue to apply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SMA and this Implementation Arrangement until superseded.

Section V

Logistics Cost Sharing (LCS)

1. The LCS contributions shall be provided in-kind.
2. Under the LCS program, to support permanent or temporary stationing of the U.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ROK MND shall furnish equipment, supplies, and services in categories such as:
 - a. Single Ammunition Logistics System-Korea (SALS-K);
 - b. Munitions Activities Gained through Negotiations under the U.S. and ROK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AGNUM);
 - c. Distribution and storage of petroleum-based fuels, oils, and lubricants;
 - d. Transportation services;
 - e.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 f. Certain agreed rents excluding family housing;
 - g. A portion of base operations support (electricity, natural gas, water, and sewage from public utilities; storage; services for sanitation, laundry, bathing, and waste disposal);
 - h. War reserve materiel maintenance;

- i. Vehicle, equipment, and materiel purchases; and
 - j. Facility sustainment services.
3. “Korean Contractor” in implementing the LCS program under this Arrangement shall be defined as follows:
- a. An entity, that including its parent, is a domestic corporation under the Korean Corporation Tax Act and whose domestic status is recorded in the Certified Copy of Register or its successor document. A parent is defined as an entity that holds more than 50/100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in another company, as reflected in the Stock Change Certificate; or
 - b. An individual who has Korean nationality.
4.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operate the LCS Joint Coordinating Group (JCG) to review and discuss the LCS program, such as improving methods and procedures to streamline administrative processes, sharing information on current and future projects under the LCS program, and conducting a joint review of contract award and payment procedures. The Parties each shall appoint an appropriate senior-level official to co-chair the LCS JCG, and the LCS JCG co-chairs or their representatives should convene meetings as required.
5. All projects to be executed in the year of execution shall be confirmed by USFK and thereafter be approved by the ROK MND no later than December 15 of the year before the year of execution.
- a. The ROK MND acknowledges there may be changes to the original project list based on unforeseen events during the execution year.
 - b. The Parties shall take the following necessary measures to manage adjustments in projects for transparent implementation and in order to minimize the amount of unexecuted LCS contributions. In this regard, USFK shall provide (1) the approved project list; and (2) subsequent updates to the ROK MND at least once every quarter.
6. The Parties shall execute LCS project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nd details:
- a. USFK shall order the equipment, supplies, and services based on contracts USFK solicits and negotiates.
 - b. USFK makes contract source selection decisions, prepares the contract drafts

and submits them to the ROK MND for final approval and award.

- c. The ROK MND shall notify USFK in writing of its decision within fifteen (15) calendar days of USFK's request for final approval.
- d. During this time, if the ROK MND requests any missing documents from USFK required for approval, the period of time between the request and submission of those documents shall be excluded.
- e. The LCS JCG shall meet within seven (7) calendar days upon either Party's request after the ROK MND's denial to consult and resolve the disagreement. If the LCS JCG fails to resolve the disagreement, either Party may request a meeting at the JCSC for resolution.
- f. USFK shall issue the Inspection Report to the contractor after mutually determined periods for each project.
- g. The contractor shall provide USFK the invoice, and USFK shall provide the ROK MND with the Inspection Report and the copy of the invoice.
- h. In the case of LCS contracts with option years, USFK shall submit supporting documents to the ROK MND annually in order to verify qualification of Korean Contractors.
- i. If it is determined a contractor no longer meets the Korean Contractor definition, the contractor shall be allowed to complete the awarded period of performance.

7. The ROK MND shall exercise a carryover process of funds into the subsequent calendar year for equipment, supplies, and services that are on a contract or separate arrangements approved by the Parties, but cannot be delivered by December 31 of the program year, or equipment, supplies, and services whose solicitation is announced by December 1 of the program year. Remaining unsolicited LCS funds may be expended on public utilities by December 31 of the program year. Solicitation shall mean a contract has been advertised.

8. The LCS JCG shall consult and endeavor to address significant issu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ntract disputes, protests, and resulting litigation arising from the execution of the LCS program. One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any such significant issues within seven (7) working days of learning of the issue and provide the other Party copies of relevant documents within fifteen (15) working days of the receipt of such documents.

9.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arties in the execution of the LCS shall be set out in a separate implementing agreement.

- a. The Parties shall make best efforts for this implementing agreement to be concluded within ninety (90) day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SMA.
- b. The implementing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supersede the Implementing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oncerning Logistics Cost Sharing, signed at Seoul on October 22, 2019, which shall continue to apply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SMA and this Implementation Arrangement until superseded.

Section VI

Information Sharing

1. To enhance information sharing:

- a. The format of materials USFK provides to the ROK MND shall be determined through mutual agreement by the JCSC except as specified in Section IV, 8c(3).
- b. The ROK MND may share the result of the JCSC's discussion about allocations for the categori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Assembly.
- c. The Parties shall prepare the 'SMA Comprehensive Annual Execution Report' on the contributions across the categories each is respectively responsible for executing during the previous year, and submit it to the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hereinafter referred to as "KIDD") co-chairs by April of the year after the year of execution.
- d. USFK shall provide the ROK MND with a detailed status report of unexecuted ROKFC cash contributions twice each calendar year. ROK MND shall provide USFK with a detailed status report of unexpended in-kind contributions out of the total ROKFC in-kind contributions once each calendar year.
- e. The ROK MND may share the information from the aforementioned reports and

other periodic execution reports with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Assembly in a manner that would not compromise military security.

Section VII

Joint Cost Sharing Committee

The Joint Cost Sharing Committee (JCSC), co-chaired by the Director General, International Policy Bureau, ROK MND, and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J-5, USFK, shall meet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Section VIII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1.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of the SMA, shall continue to operate the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as follows:
 - a. The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shall consist of working-level officials of both Parties and representatives of either Party's government. Each side shall appoint appropriate Director-General level officials as co-chairs.
 - b. The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shall meet within ninety (90) day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SMA and shall be operated until the SMA is terminated.
 - c. The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shall be convened at least twice a year. The Parties shall report the result of the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sessions to the KIDD each year.
 - d. Agendas of the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shall consist of issues proposed by each Party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current SMA syste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lternative approaches.

Section IX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Amendment

1. This Implementation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st written notification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dicating that

their internal legal requirements for this Arrangement to enter into force have been fulfilled, with effect from January 1, 2020, and shall remain in force for the duration of the SMA.

2. To the extent this Implementation Arrangement requires any obligation to have been fulfilled between January 1, 2020 and the date on which this Implementation Arrangement enters into force, the Parties shall consult with each other regarding whether that obligation has been fulfilled and, where necessary, shall mutually determine a new date by which to fulfill the obligation.

3. This Implementation Arrangement may be revised and amended by mutual cons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DONE at Seoul, Korea, this eighth day of April 2021, in duplicate originals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UNITED STATES FORCES KOREA